

Ⅲ. 주요 경제 현안

1. 재정적자 시대의 돌입과 향후 과제

- (적자재정의 배경과 규모) 세수실적이 저조하고 구조조정과 경기부양 등의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약 11조 5천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됨. 이번 2차 추경 예산에 따르면 98년 예산규모는 80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약 12.2% 증가할 것이며,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GDP대비 4% 정도(17조 5,000억 원)임
- (경제적 효과) 국채발행 방법에 따라 금리와 물가의 상승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경기부양에 투입되는 자금은 약 3조 8천억 원 규모로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과제) 당분간 적자재정은 불가피 할 것이나 장기적 성장을 위한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과세 기반 확충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적자재정의 배경과 규모

- **(제2차 추경예산의 배경)** 경기의 침체에 따라 세수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실업대책을 위한 재원마련, 경기활성화를 위한 SOC투자 등의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약 11조 5천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됨
 - 세수부족: 극심한 경기 침체에 따라 5.5조 원의 세수 부족 발생. 세율인상에 따른 추가 세입은 0.7조 원 정도로 예상
 - 추가재정수요: 실업자 보호대책, 중소기업 수출지원, SOC 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산업은행 출자 등 약 6조 원의 신규 재정수요 발생. 추가 재정수요는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면서 GDP성장률의 지나친 하락을 막고 지나친 실업자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선정되었음
 - 세수 부족과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부 지출을 삭감하여야 하지만, 경기침체가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지출까지 줄인다면 실물부문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임
 - 따라서 정부는 11조 5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

<98년 2차 추경예산안의 개요>

재원조달		세출증액		2차 추경예산규모
국채발행	7.9조원	지역경제활성화지원	1.6조원	
공기업매각	1.2조원	SOCT투자	1.2조원	
한은잉여금	1조원	실업대책	1조원	
세출삭감	0.7조원	중소기업·수출 지원	1조원	
세율조정	0.7조원	산업은행 출자	1조원	
		국채이자	0.2조원	
합계	11.5조원	합계	6조원	

자료: 재정경제원

- (제2차 추경예산에 따른 재정적자 규모) 이에 따라 98년 예산규모는 80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2.2% 증가할 것이며,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GDP대비 4% 정도(17조 5,000억 원)가 될 것임
 - 이러한 재정적자 규모는 80년대 초와 비슷한 수준
 - 재원조달을 위해서 정부는 ▷국채발행 ▷공기업지분 매각 ▷한은 잉여금 ▷세율조정(이자소득세, 교통세 인상) ▷세출삭감 등을 추진하기로 함

□ 적자재정의 경제적 효과

- (국채발행의 영향) 7조 9,000억 원 규모의 국채발행 방법에 따라 금리와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 (민간매각시) 소위 驅逐效果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와 투자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한은인수시) 구축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나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의 위험성이 있음. 현재 민간의 국공채소화능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채의 한은인수가 예상됨.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한은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통화의 유통속도가 크게 하락하고 있어 통화량 증가가 물가상승을 자극하는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국외매각시) 구축효과와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으나 국가신인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음
- (경기부양효과) 6조 원의 세출예산 증액분 중 경기부양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자금은 약 3조 8천억 원 규모로 이는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 경기부양효과는 미지수

- **(대외신인도)** 적자재정이 누적될 경우 국제증가가 수반되어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음
- **(재정운영의 경직성)** 국채의 증가는 이자부담을 동반하여 향후 재정운영의 신속성을 저해시켜 꼭 필요한 투자사업의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조세부담 및 물가상승)** 또한 향후 정부의 원리금 상환에 따른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적자가 심각해질 경우 정부가 고의적으로 물가상승을 유발시켜 국채부담을 가볍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운영 과제

- **(재정의 효율성 제고)** 구조조정의 지속적 수행과 실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당분간 적자재정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 성장을 위한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조만간 균형재정을 회복하여야 함
 -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성과주의 예산편성제도 도입, 중기예산편성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회계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중기재정계획에는 향후 5년 정도의 재정운영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획기간 별 및 각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허용폭이 명시되어야 함
- **(정부지출의 재검토)** 정부사업중 생산성이 낮은 부문은 민영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재정지출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함
 - 특히 일반회계예산의 20.9%를 차지하는 국방예산 구조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
 - 선진국의 경험을 볼 때 재정적자 규모와 실업자수 사이에는 正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 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실업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함. 일률적 지원확대 보다는 한시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과세기반 확충과 감시기능의 강화)** 조세체계의 전반적 개혁을 통해 과세기반의 확충하여 세입을 확보하여야 함. 또한 정부의 재정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재정감시기능이 확충되어야 함
 - 감사원의 독립적 감사 이외에도 국회 예결위의 상설화 등 행정부 이외의 재정감시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함

(박 용 주 yjpark@hri.co.kr ☎724-4033)